

By email

2019. 7. 15.

수 신: 센터코인(주식회사 새길)

참 조: 정영학 대표님

발 신 마스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환, 김종휘, 김태환

제 목: 센터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관련 법률의견서

본 사무소는 센터코인(주식회사 새길, 이하 “귀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공고

MAST 법률사무소는 귀사에서 2019. 7. 12. 제공한 백서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 후 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귀사 및/또는 센터코인을 상장할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의견서에 포함된 법률에 관한 판단이나 의견은 법률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귀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본 의견 검토 당시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귀사 및/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센터코인을 거래하거나 상장함으로써 제3자(개인, 법인,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와 법적 분쟁이 개시되는 경우, MAST 법률사무소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

*

의견서

1. 센터코인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사는 온·오프라인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센터코인을 개발·발행하였고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 귀사가 발행한 센터코인이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이란 i)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는 최소화된 자본 단위, ii)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주로서의 권리(이하 “주주권”)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주식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발행된 주식의 수 X 액면가격] 만큼 자본금이 형성됩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주로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상법 제369조 의결권, 상법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 등 공익권)과 수익권(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센터코인이 주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센터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국내 법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하며, **센터코인 보유자들이 센터코인을 발행한 국내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i) 귀사의 백서에 따르면 센터코인은 온·오프라인 상거래 시장의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ii) 센터코인 홀더들은 귀사의 프로젝트 내용

의 성취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제수단으로서 센터코인을 활용할 수 있을 뿐
ii) 센터코인을 발행한 귀사에게 국내법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센터코인 발행행위가 국내법상 주식발행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센터코인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센터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 증권은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4 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 2 편제 5 장, 제 3 편제 1 장(제 8 편부터 제 10 편까지의 규정 중 제 2 편제 5 장, 제 3 편제 1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 178 조·제 179 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15.7.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에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 1 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 110 조의 수익증권,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2017.4.18.>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 5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황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 165 조의 11 제 1 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 의 2. 「은행법」 제 3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 의 3. 「금융지주회사법」 제 15 조의 2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2 호, 제 513 조 및 제 516 조의 2 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제 3 호의 2, 제 3 호의 3 및 제 4 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 2 항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⑨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지분증권이란 주식회사의 주식 등 출자지분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센터코인은 귀사에 대한 출자지분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창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증권이란 증권 소유자가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 징표입니다. 귀사는 센터코인 홀더들에게 센터코인 판매대금을 상환할 것을 밝힌 적이 없으며, 귀사가 진행하는 바이백 이벤트는 귀사의 임의적 결정에 따른 일시적인 환매조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센터코인 홀더들이 귀사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센터코인은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입니다. 센터코인 홀더들과 귀사 사이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결제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귀사의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손익분배 계약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센터코인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도 센터코인은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센터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센터코인의 거래행위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센터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이른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 명백히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센터코인이 거래소에서 가격변동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다면 센터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을 확정된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센터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산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바라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법무부, 국회, 사법부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 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겠습니다.

가. 센터코인의 거래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센터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 i) 귀사는 거래소 회원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방으로 센터코인을 거래할 수 있고, ii) 센터코인을 취득한 코인홀더들은 다시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인과 센터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사가 백서 등을 통해 밝힌 센터코인에 관한 각종 정보와 사실들이 허위 정보가 아니라면, 센터코인이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거래된다고 하여도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는 없습니다.

나. 센터코인의 거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은 제 2 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핵심적 판단기준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센터코인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 i) 각 거래의 주체들은 가격변동성을 인지하고 센터코인을 거래하는 것이며, ii) 바이백 이벤트 역시 각 센터코인 홀더들이 취득을 위해 지출한 거래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iii) 귀사는 센터코인을 거래대금 이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센터코인 거래대금을 다시 반환해준다는 등 원금보장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센터코인의 거래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센터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적용대상인지 여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을 받아서 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가상화폐가 법적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과 유사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한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결제시스템을 가맹점 등에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금융감독원중소금융과, 2017. 1.)』고 회신 하였습니다.

위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사례는 비트코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트코

인과 성질이 다른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해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일반적으로 가상화폐의 종류, 기술적 특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자체의 지급수단성을 부정해왔으므로, 센터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하여 위 법령해석 사례를 적용하여 평가해본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나 허가 등을 얻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거나 법원의 판단(판례)이 발생할 경우 위 유권해석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므로, 법령 제정 또는 판례가 선고된 이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의 등록이 할 수도 있습니다. 끝.

*

*

*

본 의견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 판단 및 처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용도에 또는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본 의견서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 법률사무소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트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정 환



변호사 김 중 휘



변호사 김 태 환

